광주공항~김해·양양 노선 부활 나섰다

광주시 "지역민에 꼭 필요" 지자체·항공사 협조 요청 정치권도 간담회 등 동참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광주~김해, 광주~양양 항공노선 재취항을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개 노선을 재개설하려고 해당 자치단체, 정치권, 항 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 김해 노선은 1989년 9월부터 2001년 10월 까지 운항하다가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됐지만 최근 교통수요가 늘어나 사업 성이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현재 광주와 부산을 잇는 교통 인프라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 철도도 없는 상 대여서 육로를 통해 광주에서 부산을 가려 면 4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광주~김해 노선은 광주와 부산, 동·서 화합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새정치민주연 합 임내현(광주 북구을)·새누리당 하태경 (부산 해운대기장을)·이헌승(부산 진구 을) 의원이 취항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이 들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항 공사 관계자들과 노선 재취항을 위한 간 담회를 하기도 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공항 공사가 2013년 국가교통 DB 통계를 적용 해 분석한 결과 광주~부산 수요권역 일 일 통행량은 8805명에 이르고, 이에 항공 분담률을 적용하면 일 600~1230명 정도 의 항공수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B737 탑승률 60%를 기준으로 하루 왕복 3~5회가 가능한 수치다.

임 의원은 "육로 밖에 없는 교통 인프라 가 영호남의 교류를 더욱 가로 막고 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아 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가진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에 취항을 요청했다.

광주~양양 노선은 2013년 1월 개설돼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에서 지난 2월까지 18인승 항공기를 금~일요일 주 3회 왕복 운항했다.

항공사 측은 기체 점검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았다.

이 노선은 강원 관광객과 군부대 입영· 면회객들이 애용했지만 저조한 탑승률은 운항 재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 례를 근거로 월 7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개 노선 모두 지역민에게 는 아주 유용하지만 항공사들이 신중한 모 습을 보여 선뜻 결정이 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재취항을 추진하겠다"고 말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체육지원국 폐지·복지업무 강화

조직개편안 … 내년 1월 적용 무

광주시가 체육지원국 폐지와 신규 행정수요 대처 등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원은 3344명으로 13명이 늘게 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로 조직된 체육지원 국을 폐지하고 복지관련 업무를 강화,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 3실 8국 1본부에서 3실 6국 2본부 체제로 바뀐다.

조직개편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출범 이후 모두 여섯 번 이뤄졌지만, 실국이 조정되는 중폭 이상 규모는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했던 체육지원국 내 체육진흥과는 문화관광체육실로, 수영대회 지원과는 기획조정실로, U대회 관리과는 폐지했다.

과(課) 단위인 11관 4담당관 42개 과 는 변동이 없다. 공무원교육원 등 9개 직 속기관, 16개 사업소도 이번 개편과는 무관하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맞춘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분과 (分課)하는 등 강화했다. 노인 관련 업무 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기존 장애인 관 련 업무는 장애인복지과가 맡는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 따른 효율성 제고 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실국 및 과 조정 도 추진된다. 경제부시장 직속인 일자리 투자정책국과 경제산업국이 일자리경 제국과 전략산업본부로 이름을 바꿨다. 관련 과도 애초 3개 과와 5개 과가 각 4 개씩으로 조정됐다.

전략산업본부에는 미래산업정책관,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과, 투자유치 과가 자리 잡았으며 일자리 정책국은 일 자리정책과, 기업육성과, 민생경제과, 생명농업과로 조정됐다.

자동차와 에너지산업 등은 투자유치 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한 곳으로 묶었 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기획조정실의 혁신도시 협력추진단 은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올 보건복지분야 7개 기관표창 수상

독거노인 돌봄평가서 대상

전남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 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상 을 수상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보건복 지분야에서 7개 기관표창을 휩쓸었다.

전남도는 29일 "오는 12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합동 시상식에서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함께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게됐다"고밝혔다.

전남도는 IT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가정 응급호출 장비와 화재 및 가스 누출 감지센서기능 장비 등 독거노인 응급 장비를 전국 최대인 1만3956대를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 54명을 채용해 응급 장비 전수점검을 조기 완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기관표창 외에도 올 한 해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3년 연속 대상,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 대상, 인구의 날 출산정책 최우수기관, 의료급여사례관리평가 대상,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 이에 따라 상사업비 53억7700만원, 포상금 3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됐다. /윤현석기자chadol@



중국 공무원 시험에 몰려든 인파 29일 중국 안후이성의 수도 허페이에서 열리는 국가 공무원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지원자들.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만 7800명의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39만4600여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50대 1로, 최근 5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원을 '황금그릇'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정부의 반(反)부패 활동이 강화되면서 그 인기가 다소 식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부실

대부분 텅텅 비어 있고 관리 감독 엉망 市. 갂사서 9명 문책 요구 ··· 경찰도 수사 나서

광주시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협상 없이 사들인 주택은 대부분 비어 있고, 관리 감독도 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15~30일 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도시공사 직원 2명 중징계, 지도·감독책임으로 시 본청 근무자 7명 훈계 등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매입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비위가 의심 되는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 한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하 도록 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다.

광주 도시공사는 2011~2013년 이 사업에 참여해 514억원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샀지만,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가 감사에 나섰다.

북구 용봉동 A빌라는 평가 점수가 69. 94점으로 매입기준(80점)에 미달했는데도 도시공사는 아무런 사유없이 가점 20점을 주고 11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17호 중 13호가 비어 있고 매입 후 개·보수 공사비로만 2000만원 이상이 투 입됐다.

광산구 신창동 B주택은 애초 건물지반 과 건축상태가 열악해 탈락했지만 도시공 사는 특별한 보완절차 없이 매입했다. 27 호중 22호가 비어있다.

임대주택 매입 심사를 위해 구성한 매입 선정위원회는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 는가 하면 일부 심사위원은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한 예도 있었다.

/연합뉴스

이밖에 가격협상 없이 감정평가액대로 매입가를 정하고 계약기간이나 임대료는 들쭉날쭉해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매입과정에서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의 부탁을 받고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있거나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집중 사는 등 비위도 의심돼 시는 경찰에수사자료로 통보토록했다.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친환경 우렁이농법 환경 파괴 … 대책 마련을"

박철홍 전남도의원 주장

잔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담양1)이 전 남도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 경우렁이 농법이 오히려 환경 파괴를 초 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동부지역본부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전남도가 2012년 72억원을 비롯해 올해까지 해마다 120억여원을 친환경 우렁이 농법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외래종인 왕우렁이는 외국에서는 세계 100대 침입종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황소개구리와 같은 생태계 위해



성 2등급으로 지정하 려했으나 친환경을 중 시하는 농림축산식품 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이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왕우렁이가 겨울철 동사하기 때문에 환경피해 우려가 없다고 일 각에서는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기 후에 적응한 왕우렁이는 하천까지 유입 돼 하천의 풀을 다 갉아 먹어 하천 오염 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